

전북자치도, 남원 상생발전 완성도 높인다

남원 성장 잠재력 극대화 총력 대응... 미래 먹거리 선점 · 제2중앙경찰학교 · 국립공공의대까지 남원 유치 '온합'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시와 협력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도는 14일 오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부터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조망됐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업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167만㎡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며, 국공유지 100%라는 점에서 추가 토지 매입 없이 즉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의 후보지 분석 및 사업 방식 연구용역이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입지 우위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 선정 분위기를 확산하며, 남원시와 함께 부지 실사 및 지자체 면접 등 2차 심사에 대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수련원 신축도 남원 유치 청사진의 한 축이다. 어현동 시유지에 442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련원을 건립한다는 구상으로, 경찰청 중기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됐다. 해안이나 산간에 치우친 기존 시설과 달리 도심 접근성, 문화자원,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운영이 본격화 되면 연간 217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속도를 낸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632억 원 규모

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며, 2026년 정부예산에 연구비와 설계비 39억 원이 반영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상반기 법안 제정을 목표로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2018년 개관 이후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시립김병중미술관은 건물 노후화로 전면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합파우 예술특화지역의 핵심 거점으로서 미술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유치 경쟁도 본격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남원시는 합파우 유원지 내 12만㎡ 규모 부지를 제시하며 기존 시립미술관·꽃길공예관·도자전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전통예술과 현대미술이 융합하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문화부 수요 조사에 적극 대응해 분관을 전북에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경찰학교와 공공의대 등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남원의 생활 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성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김기두 기자

장애인 자립지원 현장행정 강화

노홍석 행정부지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 · 자립지원 인프라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자립생활 체험실과 각종 프로그램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이날 센터로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현황 △장애에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자립생활 체험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자립생활 체험실과 프로그램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장애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현장 프로그램들을 접

했다. 특히 탈시설이나 보호자 고령화 등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립생활 체험실의 안전성과 운영 내실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본관 1·2층에 설치된 8개의 프로그램실을 살펴보고,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심리·재활 치료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에는 다목적재활실, 아쿠아닉스실, 스누벨렌스(심리안정실), VR재활실, 클라이밍실, 음악스튜디오, 아하도서관, 체력증진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행정 · 인사 시스템, 법과 원칙 벗어나... 개선 시급"

소방노조 "조직 신뢰성 현장 대응 역량 약화"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의 행정과 인사 운영 전반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이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 회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소방지부 회원 등 50여명은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소방본부의 행정 · 인사 시스템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직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공직 행사 운영의 투명성 부족이다. 노조는 공식 행사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이 개인적 성격의 행사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공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 회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소방지부 회원 등 50여명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은 특정 지역이나 인맥 중심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승진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 부서 근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현장 근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인사 관련 설문조사와 운영 계획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

졌다.

노조는 전 직원 의견 수렴 결과가 실제 인사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인사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자의적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현장 인력 운영과 근무 여건의 비합리성도 지적했다.

인력 공백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으로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사·휴식 등 기본적인 근무 여건조차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방관 개인의 피로 누적을 넘어,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노사 협의 구조의 형식화도 문제로 거론됐다. 노조는 법에 따라 운영해야 할 노사 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된 사안조차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익산시장 출마 예정'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100년 미래 도시로 디자인"

익산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도시 정책의 방향을 180도 바꿔 익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도시 비전의 핵심은 '확장이 아닌 회복, 개발이 아닌 삶'이다.

조 전 청장은 "지금 익산은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빈집 · 공실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곽 확장과 공공 위주 정책을 반복한다면 익산은 더 빠르게 공동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익산에 필요한 것은 확장이 아니라 회복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도시 회복의 출발점으로 구도심과 역세권, 원도심을 제시했



익산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1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도시 정책의 방향을 180도 바꿔 익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

다. 그는 "재개발 ·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과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 인허가 절차의 과감한 개선 등 사업성

이 성립되는 구조를 익산시가 직접 만들겠다"면서 "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추진자로 책임 있게 개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익산역 인근 33만㎡ 부지를 중심으로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 · 일자리 · 주거 · 상권이 결합된 고밀도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익산역 선상 공간을 재구성해 철도 · 고속 · 시외버스를 연결하는 원스톱 환승 체계 구축과 시청 기업 · 문화 부서 배치도 제시했다.

환경강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에는 반대한다"라며 "시민의 일상이 살아나는 생활형 명품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익산시민들은 지금 도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구도심과 원도심부터 콤팩트하게, 시민의 행복은 임팩트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3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

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

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세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

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을 방문해 신청 ·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 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전북소방, 노조 성명 반박... "주요 의혹 사실과 달라"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방본부는 먼저 공직 행사 사유화 및 향음 부수 의혹과 관련해, 2023년 5월 27일 열린 한바탕 어울마당 행사는 매년 공문에 따라 실시되는 직원 화합 행사로,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약 120명이 영화 관람에 참여한 공식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행사는 소방본부장의 생일과는 무관한 날짜에 진행됐으며, 영화 상영 전 약 4분간 진행된 취임 1주년 축하하는 본부장이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본부장 또한 해당 행위를 경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 카르탈에 의한 승진 독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사무관(소방령) 승진자 11명 가운데 노조가 주장한 특정 지역 연고자는 지역별로 1명에 불과해, 특정 지역이 승진을 독점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른바 '베드퀴슬'(비위 신고) 관련 인사가 대거 승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승진자 중 레드퀴슬 관련자는 1명뿐이며, 해당 사안은 2024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찰 처분 심의회를 통해 '특별교육' 조치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승진 심사는 해당 사안 종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인사 운영 설문조사 조작 및 편파적 인사계획 수립 의혹에 대해서도 소방본부는 설문 결과를 전 직원에게 그대로 공개했으며, 조작은 없었다고 했다.

기피 관서 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잠수소방서 출퇴근 여건 개선, 군산소방서의 지속적 인접 기피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인력 공백 및 노사 협의의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전북소방본부는 사전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예산 결산을 고려해 별도 정원과 기간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정원은 2024년 22명에서 2025년 58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간제 채용 인원 역시 단계적으로 늘려 2026년에는 25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6년 정원 증원분 78명도 채용 인원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남원시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 · 논의하고,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 김영태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남원시의회 임기를 만

년 남겨두고 열리는 회기라며, 지난 의정활동을 성찰하고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역경제 회복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의정 △남원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제시하며, "제9대 남원시의회는 주어진 임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있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4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두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관광정책만으로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소멸 위

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창원 크리에이티브 중심의 홍보 체계 구축 △관광객 체감형 '부안형 반값여행' 도입 △르네상스 · 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 관광정책 전환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2026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며 올해는 살면서 해로 군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군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